

INTERNATIONAL MEDICAL TRAVEL JOURNAL

SOUTH KOREA: South Korea launches medical tourism plan

The South Korea government has announced that from 2012, foreign patients will be able to get compensation if they fall victim to medical malpractice in South Korea. Currently, there is no proper compensation system for foreign patients on malpractice as hospitals and clinics are reluctant to pay higher subscription rates for insurance. The government will set up a mutual aid association. The association will have hospitals as members and each member hospital will pay a certain amount of money from the fees it charges foreign patients. The association will use the pool of money to compensate these patient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ill operate the mutual aid association on a temporary basis until the compensation system and legal authorisation for the body is complete.

The new mutual is part of a detailed plan to boost medical tourism with the aim to increase the total number of foreign patients going to South Korea to 300,000 by 2015. The government plans to actively promote medical tourism, while encouraging the private sector to invest more and supporting them through necessary policy changes. The government will also cooperate with related state agencies to relax visa rules so that foreign patients can apply to visit more easily. Hospitals will also be able to sell drugs to foreign patients directly without having to refer their prescriptions to nearby pharmacies.

The government will also introduce various deregulation policies on the construction of accommodation facilities at hospitals. It will allow foreign medical staff to treat patients and participate in research. The ministry has also pledged to support the training of more medical translators and expand the services of a medical call center. And it will introduce an annual survey of foreign patients to better know what they want to be improved. Other plans to keep improving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include rating clinics and hospitals on a star hotel system, with the top ones being five-star establishments.

Under the medical tourism plan, the government will issue certificates to medical tourism agencies. The authorities see Korea as being behind competitors in terms of global awareness and brand image.

Korea's cosmetic surgery industry has been booming in recent years, with demand generated from both domestic customers and inbound travellers. But echoing the government, many in the industry are disappointed with the efforts of international advisors, and an existing medical tourism association, that they claim is focused solely on medical treatment rather than cosmetic surgery that brings the vast majority of health tourists to the country. The Korea Medical Tourism Association was founded midway through 2008 but cosmetic surgeons, particularly those in Gangnam, are unhappy with the organization. Gangnam is the fashion and beauty centre of the capital, and contains most of the top cosmetic surgery clinics.

More than 50 cosmetic surgeons met in southern Seoul to set up the nation's first association aimed at attracting foreigners interested in receiving cosmetic surgery. Kim Young-jin, responsible for establishing the association said, "The existing medical tourism agencies here have been inefficient, while failing to represent the interests of the cosmetic surgery industry. Under the stewardship of the new association, we are poised to avoid the existing framework so as to create the market independently in a proactive manner. We will carry out many activities. Up until now, the market has been disrupted due to some domestic or overseas agencies, which brokered medical tourism in Korea in inappropriate ways. We will make efforts to grapple with such problems."

외국인환자 원내조제 허용등 복지부 의료관광 활성화 38 개 과제 발표

기사입력 2011-06-08 18:40 | 최종수정 2011-06-08 18:40

외국인환자 원내조제 허용

의료사고 대비 공제회 설립·한시적 공제료 지원안 발표

복지부, 8 일 의료관광활성화 38 개 과제 발표

의료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공제회 설립이 추진된다.

또한 한시적으로 정부가 공제회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되며 해외환자의 경우 원내조제를 허용하는 의약분업 예외조항 도입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8 일 개최된 제 11 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대책을 기획재정부와 공동 발표했다.

7 대 중점과제로는 ▲외국인환자 배상시스템 도입 ▲외국인환자 원내 조제 허용 ▲의료기관내 숙박시설 등 신·증축시 용적을 완화 ▲Medical Korea Academy 연수 확대와 외국의료인 제한적 임상참여 허용 ▲전문인력 양성 확대 ▲의료기관별 외국인환자 수용성 평가 ▲외국인 환자 비자절차 간소화 등이 선정됐다.

13 대 일반과제로는 ▲유치업자의 일부 여행업 허용 ▲매년 유치실적 상위기관 명단 발표 ▲범정부적 해외홍보 등이 채택됐다.

▲신흥시장 개척과 한국의료 홍보 강화 ▲중증환자 유치 안정적 채널 구축 ▲외국인 환자를 위한 진료가격 가이드라인 제공 등은 18 대 지속관리과제로 발표됐다.

복지부는 "활성화 대책으로 외국인 환자의 불편이 줄고 유치 등록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의료관광 활성화 과제를 공동발굴해 의료관광사업 2 단계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11 만명, 2015 년까지는 30 만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0 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8 만 1789 명으로 2009 년 6 만 201 명보다 2 만여명이 늘었으며 진료수익 역시 2010 년 1032 억원으로 2009 년 547 억원에 비해 2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복지부는 집계했다.

기사제공 : 헬스미디어

복지부, 2015 년까지 해외환자 30 만명 유치계획

의료기관 내 숙박시설 건축시 용적을 완화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정부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외환자에 대한 원내조제를 허용하고 배상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제 11 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2015년까지 해외환자 30만명 유치를 목표로 아시아 의료관광 허브 도약을 위한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2009년 5월 본격화한 우리나라 의료관광사업은 그동안 정부의 재정 투입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 성장 기반을 구축했다.

그러나 한국의료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부족한 인프라 등으로 아시아 의료관광을 선도하는 태국과 싱가포르, 인도 등에 비해서는 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유치한 외국인 환자는 8만 1천 789명에 그친 반면, 태국은 156만명, 싱가포르는 72만명, 인도는 73만명에 달했다.

복지부는 먼저 외국인환자 배상 시스템을 도입하고 해외환자유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제회를 설립, 책임공제 가입시 한시적으로 공제료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이는 의료사고 고손해율, 고가 보험료 등으로 의료기관이 배상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의료기관 내에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숙박시설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용적률 적용(일반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 내 건축시 20% 범위 내)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의료기관 부대사업으로 숙박업은 인정됐으나 신증축시 용적률 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복지부는 해외환자에게도 입원환자나 장애인처럼 병원에서 약을 직접 조제해주는 원내조제를 허용해 원스톱 서비스(one-stop)를 가능토록 했다.

한국의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외국의료인 대상 연수교육 '메디칼 코리아 아카데미'를 확대하고 해외환자의 언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통역사도 연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린다. 또 온라인 상담창구 개설, 전과정 담임상담제 구축 등 메디컬 콜센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기관별 외국인 환자 수용성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등록기관 증가에도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국제적 수준의 의료 부대서비스와 인프라구축 등 평가기준이 부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등록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수용성평가와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제출서류가 간소화되는 등 비자제도도 개선된다. 그동안 메디컬 비자가 도입됐지만 제출서류가 많고 세부기준 적용이 일부 상이해 비자발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나 유치업자의 보증이 있는 경우 치료비 등 제정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법상 유치업자에게 숙박알선이나 항공권 구매 등 여행업 행위를 허용키로 했다. 자기 자본금 2억원을 보유 하고 있는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환자 손해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1억원)만 가입하면 의료법상 유치업자로 등록이 허용된다.

복지부는 이밖에 유치실적 평가와 정부 포상 확대, 범정부적 해외홍보 활성화 지원, 해외시장 정보수집 등 지원체계 강화, 의료기관 명칭의 외국어 병행 표시, 국제진료 의료 관광 관련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증 도입 등 13대 일반 과제도 제시했다.

김원중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인근 숙박시설과 연계해 해외환자들을 받고 있는데 현장에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건의가 들어와 용적률을 완화키로 했다"고 "국내 한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전체 의료기관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어 한국 의료의 신뢰향상 차원에서 공제회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방문할 때 불편을 최소화하고 유치 등록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